

정부, 美 쇠고기 고시 언제 결행할까

# 춧불민심 - 대미관계 사이 타이밍 저울질

## “FTA 비준 앞두고 무기한 늦출 수 없어 국민 안전 장치 구비땐 곧바로 고시할 것”

정부와 여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를 언제쯤 결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야할 입장이지만 일단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춧불 민심’을 의식한 듯 지난 22일 당정회의 이후 “추가협상과 앞으로 검역대책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의 본 협상에 이어 추가협의, 추가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 결과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고시 절차를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입태회 정책위의장은 23일 고시 시기와 관련, “여론을 보면서

무기한 늦추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되면 곧바로 고시할 것”이라며 “혹시 검역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허점이 완벽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당정이 안전장치를 검역지침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급주 내에 쇠고기 고시를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마련 중인 검역지침이 마무리되면 수정된 고시의 관보 게재와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기는 이번 주내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위해서는 ‘춧불 민심’이라는 만만찮은 벽을 넘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난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과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시위 참석자가 다시 1만명(경찰 추산)을 넘어서는 등 춧불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미 관계도 무시못할 변수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4월 18일 협상을 타결한 이후 우리 측이 요구했던 추가협의를, 추가협상까지 모두 수용하며 추가협상을 타결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자국 업계의 이익 때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협의를 이어

추가협상까지 수용한 미국 정부는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자국 업자들이 빨리 한국에 쇠고기를 다시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개각도 고시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시 이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고시를 의회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개각을 빨리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고시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고 개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소 내장 수입 금지 대상 포함 안돼 논란

## 수입 내장 해동 후 현미경 통해 조직검사

## O157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검사 강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내장이 수입금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상 회장원위부(소장 끝 약 50cm)를 뺀 나머지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제대로 소장 끝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곱창(소장)·막창·대창 등은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부위여서 더욱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 현지 도축장을 점검하고 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측은 23일 보고서에서 도축·가공 과정에서 회장원위부를 포함해 약 2m의 소장을 잘라 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 검역 당국도 국민의 불안감을 의식, 내장의 경우 강화된 검역지침을 통해 회장원위부 포함 여부를 꼼

꼼 따질 방침이다. 우선 수입 검역 과정에서 내장은 모든 수입건별로 3개 상자 이상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는 물론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까지 동원, 소장 끝 부위에 많은 ‘파이어스패치’란 림프소절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회장원위부를 가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O157·살모넬라 등 주요 병원성 대장균 검사를 강화해 허용치를 넘을 경우 해당 물량을 돌려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내장 검역 강화의 실질적 수단으로 보이지만 WTO 규정 위반 등의 문제 때문에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측은 이 같은 정부 조치가 근본적으로 내장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파이어스 패치는 소장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만큼 조직 검사해도 이것의 밀도로 SRM을 정확하게 가려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동·조직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샘플 이외의 수입 물량의 경우 냉동상태인 만큼 소장원위부 포함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고시 무기한 연기해야” 야 3당 요구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장관 고시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공동 발표문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의면하고 끝내 고시 관보 게재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춧불집회 한달 ... 경과와 전망

#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땐 재점화 가능성 배제 못해

춧불을 손에 든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물려나온 지 24일로 꼭 한 달이 됐다.

시민들의 춧불 행렬은 최근 대체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정부의 4·21 추가협상 결과와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재점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로 가자” 시민들 거리로=지난달 2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재협상과 고시 철회 요구에 대한 정부의 ‘무반응’에 3주일만에 거리시위로 변했다.

세종로 한복판에 ‘컨테이너 차단벽’까지 등장한 가운데 촛불 집회는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경찰 추산 8만명·주최측 추산 70만명)로 진행되면서 절정을 이뤘다.

한때 소강국면에 들어서기도 했다.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집회의 제를 대운하·공영방송 수호 등 5대 의제로 확대하고 정권퇴진 운동 불사 등의 언급을 한 데 따른 내부 논란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과 21일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 등 수습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에서

## 재협상 요구 3주만에 거리시위 변해

## ‘6·10항쟁’ 절정 ... 한때 의제 싸고 논란

지난달 24일 서울 청계광장에 모인 촛불문화제 참가자 중 일부 청년들로부터 “청와대로 가자”는 함성이 터져나오자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인근 차도로 우르르 쏟아져나온 것.

◇거리시위 대규모화=고시 강행 방침이 나온 29일 집회에서 경찰 추산으로는 최초로 참가자 수가 1만명을 넘어 31일 밤에는 4만여명(주최측 추산 14만명)이 모여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분위기가 격화됐다.

정부는 거리시위를 ‘특정 배후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으나 ‘여대생 군화발 폭행’ 등 과잉 진압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72식산 국민행동’으로 진행된 5~8일 촛불시위에는 연 인원 14만명(경찰 추산·주최측 추산 45만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불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고 있다.

◇향후 전망=국민대책회의는 추가협상 결과를 비판하면서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 현실화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당초 23일 쇠고기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던 정부는 고시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정식 수입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시간을 두고 성실한 자세로 대국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경우 촛불시위는 향후 ‘소규모 장기화’ 과정을 거쳐 소멸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예상이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조건 고시와 수입 재개에 나설 경우 촛불집회가 다시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p><b>광주광역시</b></p> <p>☎ 1588-7557</p> <p>☎ 315-7600</p> <p>7월 1일부터 개장 예정인 '광주광역시' 100주년 기념 행사</p> <p>7월 1일부터 개장 예정인 '광주광역시' 100주년 기념 행사</p>	<p><b>무인 - 심양</b></p> <p>1.500 원 (1인용) 749,000원</p> <p>1.500 원 (2인용) 799,000원</p> <p>1.500 원 (3인용) 859,000원</p>	<p><b>무인 - 홍성</b></p> <p>1.500 원 (1인용) 399,000원</p> <p>1.500 원 (2인용) 479,000원</p> <p>1.500 원 (3인용) 539,000원</p> <p>1.500 원 (4인용) 599,000원</p>	<p><b>무인 - 안동</b></p> <p>1.500 원 (1인용) 299,000원</p> <p>1.500 원 (2인용) 359,000원</p> <p>1.500 원 (3인용) 419,000원</p> <p>1.500 원 (4인용) 479,000원</p> <p>1.500 원 (5인용) 539,000원</p> <p>1.500 원 (6인용) 599,000원</p>
<p><b>무인 - 함양</b></p> <p>1.500 원 (1인용) 899,000원</p> <p>1.500 원 (2인용) 949,000원</p> <p>1.500 원 (3인용) 999,000원</p> <p>1.500 원 (4인용) 1,049,000원</p>	<p><b>무인 - 평강</b></p> <p>1.500 원 (1인용) 399,000원</p> <p>1.500 원 (2인용) 479,000원</p> <p>1.500 원 (3인용) 539,000원</p> <p>1.500 원 (4인용) 599,000원</p>	<p><b>무인 - 영주</b></p> <p>1.500 원 (1인용) 399,000원</p> <p>1.500 원 (2인용) 479,000원</p> <p>1.500 원 (3인용) 539,000원</p> <p>1.500 원 (4인용) 599,000원</p>	<p><b>무인 - 의성</b></p> <p>1.500 원 (1인용) 1,099,000원</p> <p>1.500 원 (2인용) 1,149,000원</p> <p>1.500 원 (3인용) 1,199,000원</p> <p>1.500 원 (4인용) 1,249,000원</p> <p>1.500 원 (5인용) 1,299,000원</p> <p>1.500 원 (6인용) 1,349,000원</p>